

김제시, 피지컬 AI 실증센터 유치 ‘도전장’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핵심 역할 수행”

“농업·제조업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절실”
스마트팜 밸리·농업로봇 첨단단지 등 이점 강조
“옛 김제공항 부지, 피지컬 AI사업 핵심 거점 활용”

23일 오전,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지컬 AI 실증센터 유치를 통해 김제시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김제시의 특히 심화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및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지컬 AI 기술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현재 전북 지역의 높은 고령화 비율(전북 26%, 김제시 35.6%)이 농업 및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농업 종사 인구가 약 18% 이상 감소하며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피지컬 AI는 산업 전반의 생존을 담보할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정 시장은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김제시는 농업 종사 인구의 고령화와 후계자 단절, 기후 변화라는 삼중고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AI 기술이 용

합되어 산업과 삶을 변화시키는 피지컬 AI 시대의 문앞에 서 있다”며, “이는 단지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 전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정 시장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I 관련 전문가로 안창범 서울대학교 스마트건설AI 연구센터장, 정인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김민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뿌리기술센터장이 참여해 피지컬 AI 사업모델의 구성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김제시, 피지컬 AI 최적의 입지임을 밝혀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가 피지컬 AI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네가지 강력한 이점을 내세웠다.

먼저 “김제시는 탄탄한 산업 인프라를 갖춰 스마트팜 혁신 벨리, 특장차 전문 단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 가능한 산업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는 AI 기반 미래 농업 도시로의 전환을 선도할 기반이 되며, 특히 스마트팜 혁신 벨리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디지털 농업 생태계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지컬 AI 실증센터 유치를 통해 김제시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만금 대규모 스마트팜과 연계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번째로 전략적 사업 확장 가능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 단지와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 과학 기술 단지 건설, 건설 로봇 실증형 스마트 사이트 구축단지 등 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 가능한 산업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는 AI 기반 미래 농업 도시로의 전환을 선도할 기반이 되며, 특히 스마트팜 혁신 벨리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디지털 농업 생태계의

그리고 “세번째로 농업 및 특장차 산업 효율 증대와 관련해 피지컬 AI가 적용된 지능형 농기계와 AI 농업로봇은 파종, 시비, 방제, 수확 등 농업 전 과정에 걸쳐 작업을 대행함으로써 현장 인력 부담을 줄이고 농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또한, 특장차 단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은 피지컬 AI 기술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가 압도적인 지리적 접근성과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며 정 시장은 “구 김제 공항 부

지를 피지컬 AI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김제, 전주, 익산, 완주 등 전북 주요 산업 지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 확보가 피지컬 AI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김제시가 이미 국토교통부와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전북을 위한 사업 기반 제공에 적극 나설 것”

정 시장은 이번 피지컬 AI 실증센터 유치와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선도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꿀대 타임’이라고 역설하며, 김제시가 “함께 잘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제공항 부지 활용 및 전주-김제 통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정 시장은 김제공항 부지가 피지컬 AI 실증에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전주-김제 통합 논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 시장은 “피지컬 AI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자 전북 발전의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육성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기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소멸 등 각 지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은 제22대 총선 당시 한 의원의 공약이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광동형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진 사무처장, 인현대 후기산업사 회원구조 이상현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치유농업 확대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 치유농업과 농업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시·군 관계자, 치유농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진 교수(전주지전대학)는 ‘치유농업과 정신건강, 교육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치유농업이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기반 확보, 실증 중심 사업 확대, 전북형 지속모델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최소영 과장(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은 ‘치유농업정책과 농업역할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역할 확대 방안으로 지역 특화 치유농업 콘텐츠 발굴·확대,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체계화), 농업 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반대 단체 “정치 쇼 멈춰라”

김 지사 비판 수위 높여… “편파적 홍보물·주소 이전, 기만행위”

완주-전주 행정 통합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완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송병주)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의 거처 이전과 통합 홍보물 배포에 대해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소속 완주군민 30여 명과 윤수봉·권오안 도의원과 국영석 전 고산농협장 등이 참석해서 힘을 보탤다.

대책위는 김 지사가 지난 21일 완주군 삼태읍으로 주소를 옮긴 것을 두고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군민과 소통하겠다는 주장은 통합 강행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군민 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거주하며 민심을 살피어야 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방해 삼은 조급한 행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책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행해 완주군민에게 발송한 ‘완주 전주 상생 발전 방안 105호’ 홍보물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된 내용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홍보물은 ‘통합은 이득’, ‘3대 폭탄설은 진실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를 담고 있으며, 통합 반대 의견은 전혀 담기지 않아 “공공기관이 중립을 저버린 선전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같은 홍보물이 공직선거법과 주민

투표법,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특정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지사에게 △전주-완주 통합 추진 즉각 중단 △통합 찬성 홍보물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홍보물 제작 및 발송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완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대책위의 강경한 입장이 향후 통합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 대폭 강화

농어업재해대책 개정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지원되던 복구비 항목을 확대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단기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존 보험에서 제외됐던 비보

험작물 피해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제한되고,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고체 요구권 보장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지만, 재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순창 수해복구 130명 투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30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전북도당은 24일 오전, 당 산하 지역위원회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구 인력을 순창 일대에 파견해 침수 피해 농가의 농지 정비, 하우스 청소, 시설물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전북도당 민생지원팀이 순창지역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도당은 임시대피소를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후

순창군과 협력해 농가 침수와 주택 피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수해 복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계속한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도당, 25일부터 ‘혁신정치학교’ 시범 운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오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비 지방선거 후보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프로그램 ‘혁신정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당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형 정치교육 과정으로, 전국 시도당 중 전북도당이 첫 시범 운영에 나선다.

향후 조국혁신당은 해당 프로그램을

중앙당 차원에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정치철학과 지방정치 실무를 주제로 총 20강으로 구성됐다. 강사진으로는 박규을 전남대 교수,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해민·신장식 국회의원,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이 참여해 정치철학과 지역 정치 실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전북 균형발전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형열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6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실질적인 유치 활동 강화를 주문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제5차 도·시·군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관련해 전북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연결을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위원장(전주9)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농생명산업의 최지적인 전북이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해숙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정읍군의 뚜렷한 정체성과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과 생활형 콘텐트 개발 등을 강조했고, 정성철 의원은 농업기계 공공 수리 및 보관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길 의원은 수요자 중심과 민간 참여형 구조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한 전략적 관광정책이 필요한을 건의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왕술밭 꽃대궐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도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소토리를 담은 관광자원 창출을 제안했다.

안전심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수제전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가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고정운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드론영능 활성화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가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